

보도참고자료



기획재정부
MINISTRY OF STRATEGY
AND FINANCE

보도일시	배 포 시		
배포일시	2010. 12. 13(월) 17:00	담당부서	예산실 복지예산과
담당과장	최 상 대 (2150-7210)	담당자	박재형 서기관 (2150-7211)

제목 : 국회에서 확정된 2011년 복지예산 주요내용

1. 복지예산 전체 모습

- ① 복지예산은 정부안 보다 **1,214억원 증가한 86.4조원**으로 확정
- 정부는 당초 금년도 81.2조원 대비 6.2% 증가한 86.3조원 규모로 국회 제출
 - 예산이 크게 증가한 보육·장애인 등 대부분 복지예산이 정부 원안 유지(무상보육 확대 등 보육 +0.6조원, 장애인 +0.3조원)
 - 국회 심의단계에서 취약계층 지원 등 2,160억원 추가 증액
 - * 불요불급한 예산 구조조정 △946억원 감안시, 순증액 1,214억원
- ⇒ 복지 증가율 : 6.2% → **6.3%** (총지출 : 5.7% → 5.5%)
- 총지출 대비 복지비중 : 27.9% → **28.0%**, 역대 최고 수준
- ②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부분은 취약계층 지원, 참전용사 예우 강화 등임
-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(+436억원), 참전명예수당 인상(+948억원), 슈퍼 박테리아 대응(+40억원),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(+315억원) 등
 - *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서민희망 8대 핵심과제 지원 : (정부안) 32.1 → (확정) **32.2조원**

③ 일부 언론은 국회 복지위가 증액 의결한 사업이 예결위에서 미반영된 경우 '삭감'되었다고 보도하나 이러한 표현은 오해를 일으킬 소지 ⇨ 최종 복지예산은 정부안 대비 +1,214억원 증액

- 국회에서의 예산 삭감여부는 본회의에서 확정된 최종 예산을 정부안과 비교하여 증감여부를 판단해야 하며,
 - 상임위 의결사업과 비교하여 삭감여부를 설명하는 것은 불합리
- 통상적으로 상임위에서 증액된 사업 중 일부만이 예결위에서 반영되는 것이 관례

2. 국회 확정 주요 증액내용 (정부안 대비)

① 노인·아동·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확대

【 노인 】

- 금년 종료 예정이었던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연장 (436억원, 전국 6만여개, 개소당 월 30만원씩 5개월간)
- 노인 요양 및 양로시설의 신축·증개축 지원 확대(15개소)
 - * ('10) 586 → ('11정부안) 514 → ('11최종) 584억원

【 아동 】

- 저소득 빈곤아동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 센터의 운영비 지원 확대(3,260개소, 월 350→370만원)
 - * ('10) 831 → ('11정부안) 939 → ('11최종) 976억원
- 저소득 아동이 만 18세 이후 사회 진출시 자립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 확대
 - * ('10) 63 → ('11정부안) 63 → ('11최종) 73억원

【 장애인 】

- 뇌병변 장애인의 활동 지원을 위해 **보조기구 단가 인상** (80→250만원) 및 **대상 확대**(260→501명)
 - * ('10) 2 → ('11정부안) 2 → ('11최종) 9억원
- 뇌병변 장애인 **교육 및 인권센터** 설립 신규 지원(3억원)

② 6.25, 월남전 참전 용사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

- **참전명예수당**을 월 9 → 12만원으로, **무공영예수당**을 월 15 → 18만원으로 상향 조정
 - * 참전명예수당 : ('10) 2,380 → ('11정부안) 2,534 → ('11최종) 3,374억원
 - * 무공영예수당 : ('10) 559 → ('11정부안) 540 → ('11최종) 648억원

③ 응급의료 및 전염병 예방 강화 등 공공의료 지원 강화

- 연평도 등 도서·벽지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**응급의료헬기** 신규 지원(2대, 30억원)
- 최근 유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슈퍼 박테리아 등 **병원감염 관리 사업** 대폭 확대
 - * ('10) 4 → ('11정부안) 4 → ('11최종) 44억원
- 지방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**지방의료원 기능 강화**
 - * ('10) 313 → ('11정부안) 344 → ('11최종) 410억원
- **불법 마약류**의 수요 감축을 위한 **예방 관리 및 마약류 의존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** 지원 사업 확대
 - * ('10) 13 → ('11정부안) 13 → ('11최종) 15억원

④ 식중독 예방 등 국민 식생활 안전 강화

- 집단급식 등 위생취약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성 식중독균 관리를 위해 **식중독 예방 사업 확대**

* ('10) 24 → ('11정부안) 26 → ('11최종) 31억원

- 안전한 식품 제조기반 조성을 위한 HACCP(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) 제도 활성화를 통해 **식품안전 관리 강화**

* ('10) 37 → ('11정부안) 46 → ('11최종) 61억원

⑤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지원 확대

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탈수급 촉진을 위해 일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**자가주택 개보수 지원**

* ('10) 415 → ('11정부안) 590 → ('11최종) 638억원

- 무주택 서민이 거주하는 **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확대**

* ('10) 500 → ('11정부안) 620 → ('11최종) 670억원

- 재정비촉진지구(일명 뉴타운)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강화를 위해 **재정비촉진사업 지원 확대**

* ('10) 120 → ('11정부안) 300 → ('11최종) 500억원

- 부랑인의 인권 개선과 안전 제고를 위해 **15년 이상 노후된 부랑인시설 기능 보강 대폭 확대**

* ('10) 15 → ('11정부안) 19 → ('11최종) 36억원

3. 국회 복지위에서 제기된 주요 사업의 예산반영 현황

- ◇ 양육수당 확대는 정부안에 기반영, 추가 확대는 단계적 추진 필요
- ◇ 내년도 결식아동 급식비는 지자체가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
- ◇ 영유아 예방접종은 내년도도 금년 수준으로 계속 지원
- ◇ 경로당 난방비는 금년 수준으로 내년도도 지원

1 양육수당

【정부 제출안】 '10년 대비 241억원 증액한 898억원 반영

- 지원연령 확대(24개월→36개월 미만) 및 지급단가 인상(월10만원→최대 20만원) 소요를 반영(657억원→898억원)

【복지위 제기】 2,744억원 추가 증액(대상 : 차상위이하 → 소득하위 70%이하)

【정부원안 유지 사유】

- 내년도 보육 예산은 무상보육 확대(전체가정의 50%→70%) 등 정부안에서 이미 금년보다 대폭 확대
 - * 보육예산 : ('10예산) 2.7조원 → ('11정부안) 3.3조원, 0.6조원 증
- 보육료지원 확대로 지방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양육수당까지 추가 확대할 경우 지방재정의 어려움 가중 우려
 - * 상임위 증액안 반영시, 지방비 2,973억원 추가 부담
- 향후 지급대상 확대는 정책효과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추진 필요

2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

【정부 제출안】 '10년 한시 사업으로 '11년 예산안에 미반영

- 동 사업은 '05년 분권교부세 도입시 지방이양된 사업이나
 - * '09년 및 '10년의 경우, 경제위기에 따라 결식아동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각각 542억원, 203억원을 한시적으로 국비 지원한 바 있음

【복지위 제기】 내년에도 계속 지원(상임위 부대의견)

【정부원안 유지 사유】

- 금융위기 극복으로 결식아동 수가 감소하였고, 작년 예산심의시
예결위 부대의견으로 '10년 국비 한시 지원키로 명시된 사업임
- '11년에는 경제위기 이전대로 각 지자체에서 전체 결식아동 급식
소요를 편성하여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(내년 지자체 예산에 3,105억원 기편성)

3 영유아 예방접종비

【정부 제출안】 보건소 약품비, 민간병의원 백신비 지원예산 321억원 반영

- * 예방접종 예산 : ('10) 379억원 (보건소 176억원, 민간병의원 203억원) →
('11) 321억원 (보건소 177억원, 민간병의원 144억원)

【복지위 제기】 339억원 증액(민간병의원 이용시 본인부담 15천원 → 5천원)

【정부원안 유지 사유】

- 현재 누구나 보건소를 통해 무료로 예방접종 받도록 지원 중
 - 민간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백신비(회당 8천원)는 면제받고
접종행위료(회당 15천원)만 부담하면 되도록 지원
 - 전체 영유아의 45%가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고 있으므로
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음
- * 실제 이용률 : 보건소 45%, 민간병의원 55%

4 경로당 난방비

- 내년에도 금년 수준의 국비 지원 유지(개소당 월 30만원 지원)
- * 국비 지원 : ('10) 411 → ('11) 436억원(일반회계 218억원, 특별교부세 218억원)

기획재정부 대변인